국·영·수 작년보다 쉬워…난도 높은 사탐 '변수'

영어 1등급 6~7%대로 크게 늘 듯…대학별 환산점수로 유·불리 판단을
전남대 의예 286점·조선대 의예 282점 지원 가능…에너지공대 271점

2025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뤄진 지난 14일 광주시 남구 진월동 대성여고 고사장에서 수험생들이 시험을 보고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시교육청 수능 가채점 분석 결과

광주지역 고3 수험생을 기준으로 2025학년도 수능은 작년보다 쉽게 출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어, 영어, 수학 과목이 작년 수능에 비해 쉽게 출제됐고 과학탐구 Ⅰ, Ⅱ도 까다롭지 않았던 것으로 분석됐다. 사회탐구 과목(생활과 윤리, 사회문화)은 작년 수능보다 난도가 높아 41~45점대에서 1등급 커트라인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됐다.

광주시교육청이 19일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가채점 점수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가채점 결과는 광주진학부장협의회와 시교육청 진학정보분석팀이 광주지역 고3 재학생 1만여명을 대상으로 수능 가채점 점수를 분석한 결과다.

올해 수능에서는 킬러 문항이 배제돼 작년보다 평이했으나 일부 과목은 변별력을 갖춘 것으로 파악됐다.

광주진학부장협의회와 시교육청 진학정보분석팀은 "국어영역은 지난해보다 쉬운 수준으로, 대부분 문항이 교과서 수준의 지문과 기본 독해력으로도 해결 가능한 난이도였다"고 평가했다.

수학영역은 다양한 난이도의 문항이 골고루 출제됐고 전반적으로는 전년 수능 대비 다소 쉬운 수준이었다.

영어영역 1등급은 6~7%대로 추정돼 지난해 4.71%에 비해 크게 상승했다. 지난 9월 모의평가와 마찬가지로 쉬운 지문을 제시했고 순서배열, 빈칸추론, 문장삽입 문항에서 변별력을 갖춘 문제가 출제됐다.

사회탐구는 전반적으로 전년도 수능에 비해 어렵게 출제됐다. 가장 많은 학생이 선택한 생활과 윤리, 사회문화 과목은 41~45점 수준에서 1등급 커트라인이 형성될 것으로 내다봤다.

과학탐구는 전년도 수능에 비해 전반적으로 쉽게 출제됐다. 1등급 커트라인이 과학탐구 Ⅰ 과목에서는 43~47점대, 과학탐구Ⅱ 과목에서는 44~46점대에서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분석 결과를 토대로 주요 대학의 지원 가능 점수(국·수·탐 원점수 300점 기준)도 제시됐다.

전남대는 인문계열의 경우 영어교육과 229점·국어교육과 226점·경영학부 225점·행정학과 217점 안팎이 지원 가능선이다. 인문계열 지원가능 점수는 197점 안팎으로 추정됐다.

자연계열은 의예과(일반) 286점·의예과(지역인재) 285점·치의학과(치의학전문대학원, 일반·지역) 280점·약학부 278점·수의예과 275점·전기공학과 250점·간호학과(지역) 226점 등이다. 자연계열 지원가능 점수는 수학 지정(미적분·기하) 학과 210점·수학 미지정 학과는 203점대다.

조선대 지원가능 점수는 의예과(일반) 282점·의예과(지역인재) 281점·치의예과(일반) 280점·치의예과(지역) 279점·약학과(지역) 276점·간호학과(지역) 220점 등이다.

광주교육대학교 228점 안팎, 광주과학기술원(GIST) 264점 안팎,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는 271점대에서 지원 가능할 것으로 분석됐다.

수도권의 경우 서울대학교는 인문계열 274점, 자연계열 275점 안팎에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자연계열은 서울대 응시기준에 충족한 학생들 표본에 의한 자료이다.

광주시교육청은 "이번 분석자료와 배치기준 점수는 2025학년도 정시 모집요강에 의한 것으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야 한다"면서 "오는 12월6일 수능 성적이 통지되면 대학별 환산점수로 계산해 유·불리를 판단한 뒤 지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시교육청은 수능성적 발표 이후인 12월12일 오후 4시 광주교육연구정보원 1층 대강당에서 고3 진학부장을 대상으로 실채점 결과분석 설명회도 진행한다. 같은 날 오후 7시에는 같은 장소에서 학부모를 대상으로 수능 실채점 기준 정시모집 지원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육아 스트레스로 힘들어" 쌍둥이 딸 살해한 친모

여수경찰, 구속영장 신청

육아 스트레스로 쌍둥이 딸을 살해한 40대 친모가 구속기로에 놓였다.

여수경찰은 40대 여성 A씨를 쌍둥이 딸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8시 30분께 여수시 웅천동의 한 자택에서 생후 7개월 된 쌍둥이 딸을 질식시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전업주부인 A씨는 남편이 출근한 새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후 자택에서 벗어난 A씨는 여수시 화정면 낭도의 도로 위에서 4시간 만에 경찰에 자수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육아 스트레스로 힘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녀들은 각각 안방과 작은방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과 도주우려, 증거인멸 등을 고려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범행동기를 조사중이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

나주 지식산업센터 수분양자들 부당이득금 반환 일부 승소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지식산업센터를 분양 받은 수분양자들이 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과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으나 모두 패소했다.

다만, 일부 수분양자들은 분양대행업체가 소송에 대응하지 않아 일부 승소했다.

광주지법 민사13부(부장판사 정영호)는 나주시 빛가람혁신도시 내 지식산업센터 수분양자 7명이 시공사 A건설과 분양업무를 위탁을 받은 B업체 등을 상대로 제기한 계약금 반환 등 청구의 소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19일 밝혔다.

원고들은 해당 건물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음에도 오피스텔이나 공공기관 기숙사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속여 분양대금을 받아챙겼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견본주택이나 분양안내 책자 사진에는 침대나 주방 시설 등이 구비됐지만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동산으로 광고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견본주택이나 홍보물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에 불과하고 다소 과장이나 허위가 있더라도 기망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같은 재판부는 해당 건물 수분양자 35명이 A건설과 분양대행사 C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익금 소송에서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A건설사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했지만, 재판과정에서 C업체가 별다른 변론을 하지 않자 '자백 간주(원고의 주장을 반박하지 않아 자백한 것으로 판단)'로 인정해 원고들의 청구금액을 C업체가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한편 A건설사 대표 등은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지식산업센터를 주거용으로 홍보해 분양해 이득을 챙겼다는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돼 1심재판을 받고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압수 도박자금 빼돌린 전직 경찰 징역 2년 선고

압수된 도박 자금에 손을 댄 전직 완도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해남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정경태)은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A(48)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완도경찰서에서 근무하던 A씨는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총 15회에 걸쳐 도박 관련 압수금 34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강도치상 사건의 증거물 현금 90만원을 환수 건의한 뒤 피해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관련 서류도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채무변제를 위해 증거물로 압수된 현금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자신이 수사한 도박사건에서 압수한 현금이 증거물보관실에 보관중인 것을 알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경찰 신분에도 압수물을 훔치거나 횡령하는 등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파면의 징계를 받았지만 경찰조직과 대한민국 사법질서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A씨가 불구속기소 되자 파면했다. A씨와 검찰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5월단체, 우원식 국회의장 만나 5·18헌법수록 등 촉구

5·18기념재단은 19일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5·18 정신 헌법전문 수록과 전두환·노태우 일가의 은닉재산 환수를 위한 입법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5·18기념재단에 따르면 원순석 이사장과 광주시 관계자가 이날 국회에서 우 의장을 만나 이같이 요청했다.

원 이사장은 "국회에서 개헌 특위를 설치해 5·18 정신의 헌법전문 수록을 위한 작업에 나서야 한다"면서 "헌법전문 수록은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작성한 국가보고서에 담긴 국가 권고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노태우 일가의 부정축재 은닉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철저한 수사와 은닉재산 환수를 위한 법제정도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우 의장은 "5·18 기념재단의 요청에 국회에서도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